

02 해양경찰의 역사와 제도

추록본

7

해양경찰청 부활 시기(2017.7.26. ~ 현재)

해양수산부 독립 외청 해양경찰청으로 다시 부활

해양경찰 단독 소관법률

1.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61.11.01)
2. 수상레저안전법 (99년2월 제정, 00.02.09시행)
3. 해양경비법 (12년2월제정, 12.08.23시행)
4.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14년5월제정, 14.08.22시행)
5. 해양경찰법 (19년8월제정, 20.02.21시행)
6.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19년12월 제정, 20.06.04시행)
7.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1년4월 제정, 22.04.14시행)
8.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22.06.10 제정 / 23.06.11. 시행)
9.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4.01.02 제정 / 2025.01.03. 시행)

소관법률은 조직 파트에서 자세히 다룸

의무경찰 폐지(2023.6)

핵심요약

■ 해양경찰청 부활(2017.7.26.)

- ① 국민안전처 폐지, 해양수산부 부활
해양경비안전본부 → 해양경찰청으로 명칭 변경
- ② 해경 조직법인 해양경찰법 시행(19년 제정, 20년 시행)
- ③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19년 제정, 20년 시행)
- ④ 울진서(2017년), 사천서(2022년) 신설
- ⑤ 해양경찰청 수사국 출범(2021년 1월)
- ⑥ 강릉서(2025년) 신설로 해경서 21개

■ 강릉 해양경찰서 신설(2025.2.25)

2025년 2월 25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으로 강릉 해양경찰서가 신설되어, 현재 해양경찰서는 전국 21개가 되었다.

「등불샘 학원」 해경학개론 추록본

법령
02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추록본

■ 해양경찰서(제30조)

- ① 해양경찰서에 서장 1명을 둔다.
- ② 서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 ③ 서장은 지방해양경찰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④ 지방해양경찰청에 두는 해양경찰서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고, 해양경찰서의 하부조직·관할구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별표3(지방청 소속 해양경찰서의 명칭 및 위치) -21개

- ① 중부지방청 - 인천, 평택, 태안, 보령
- ② 서해지방청 - 군산, 부안, 목포, 완도, 여수
- ③ 남해지방청 - 울산, 부산, 창원, 통영, 사천[22년 3월]
- ④ 동해지방청 - 속초, **강릉**[25년 2월], 동해, 울진, 포항
- ⑤ 제주지방청 - 제주, 서귀포

심화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0조(해양경찰서)

- ① 해양경찰서에 기획운영과·경비구조과·해양안전과·수사과·**정보외사과**·해양오염방제과 및 장비관리과를 둔다. 다만, 인천해양경찰서 및 동해해양경찰서에는 기획운영과·경비구조과·해양안전과·수사과·정보외사과·해양오염방제과·장비관리과 및 보안팀을 두고, 태안해양경찰서·완도해양경찰서·울산해양경찰서·포항해양경찰서·속초해양경찰서·보령해양경찰서·부안해양경찰서 및 울진해양경찰서 및 사천해양경찰서에는 기획운영과·경비구조과·해양안전과·수사과·정보외사과·해양오염방제과 및 장비관리운영팀을 두며, **강릉해양경찰서에는 기획운영과·경비구조과·해양안전방제과 및 수사정보과를 둔다.**
[25.2.25 개정]
- ② 각 과장 및 팀장은 경정 또는 경감으로 보한다. 다만, 해양오염방제과장은 공업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으로 보한다.
- ③ 각 과장 및 팀장의 분장사무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등불샘 학원」 해경학개론 추록본

총론
03

해양경찰 조직론

추록본

제2장 해양경찰 조직법

1 조직법과 소관법률

■ 해양경찰청 관련 소관 법령 [22/23기출]

해양경찰 단독 소관법률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61.11.01시행)
- (구) 수난구조법
- 수상레저안전법 (99년2월 제정, 00.02.09시행)
- 해양경비법 (12년2월제정, 12.08.23시행)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14년5월제정, 14.08.22시행)
- 해양경찰법 (19년8월제정, 20.02.21시행)
-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19년12월 제정, 20.06.04시행)
-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1년4월 제정, 22.04.14시행)
-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22.06.10 제정 / 23.06.11. 시행)
-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4.01.02 제정 / 2025.01.03. 시행)

소관 법률의 목적

■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해수면에서 해양경찰의 수난구조 및 조난사고의 대응과 예방을 위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 해양경찰청 공동 소관법률

경찰청 - 해양경찰청 공동 소관 법령(법+대통령령)

- 경범죄처벌법
- 경찰관직무집행법 시행령
(경찰관직무집행법 - 경찰청 단독 소관)
- 경찰공무원법
-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 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칙
-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기타 공동소관 법령

- 밀항단속법 (법무부, 해양경찰청)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소방청, 해양경찰청, 행정안전부)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해양경찰청, 행정안전부)

제4장 해양경찰공무원 관계의 발생

2 공무원 관계의 발생

■ 임용결격사유(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제8조

■ 임용자격

- 경찰공무원은 신체 및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 복수국적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자격정지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은 사람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자격정지 : 현행 형법에서는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공무원이 될 자격, 공법상의 선거권 등 자격을 정지한다.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5.01.07. 개정]

(음주운전 벌금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죄
[25.01.07. 신설]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25.01.07. 신설]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

tip ■ 경찰공무원으로 재직 중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은 다시 공무원이 될 수는 없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따라, 파면처분을 받을 때로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을 때로부터 3년이 지나면 일반 공무원은 될 수 있다.

제7장 해양경찰공무원의 책임

6 형사책임과 민사책임

■ 국가배상

◆ 심화 : 국가배상법

■ 제2조(배상책임)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의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25.1.7 신설]